

이경보정(以經補政)의 한·러 협력

Online Series

2017. 09. 14. | CO 17-27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러시아 역할론?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러시아 극동 지방의 미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와 한·러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 노동자 수입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 정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했다.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체 속에 빠진 한·러 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해 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상호 인식 차이를 확인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답은 이미 예상돼 있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자 역시 여기에 동의한다.

우리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역할에 주목한 데에는 중국 역할론의 미진함과 북·중 관계 냉각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월’(蜜月)이라 표현될 정도로 긴밀해져 온 사실도 러시아의 역할에 주목하게끔 만든 측면이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소련에 진 채무의 90퍼센트를 탕감해 주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고, 북한 철도의 현대화 사업이나 나진항 개발 등을 통해 북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왔다. 북한 역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러시아로 대신하는 듯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미국 외교당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로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¹⁾

그렇다면 러시아 역할론은 어느 정도 유효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대북 인식과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하면서 ‘쌍중단’, ‘쌍궤병행’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한편, 한미가 주도하는 제재·압박을 통한 해결에 반대하고 있다. 7월 4일, 중러 정상은 크렘린에서 회담을 갖고 ‘쌍중단’과 ‘쌍궤병행’ 양대 구상에 기반한 한반도 긴장 완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쌍중단’이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방 동시 중단’ 과제를 지칭한다. 또 ‘쌍궤병행’이란 이 같은 과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궤(목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교부 순회대사는 7월 22~2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예방하고 외무성 북아메리카 담당 국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때 러시아 측이 북한에 쌍중단 해법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미는 일단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조정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양자 제재나 강도 높은 압박은 북한 체제의 붕괴와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는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석유 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북한 살리기는 행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통해 밀가루 5,200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청진항으로 밀가루를 운송했는가 하면, 모스크바에 주러 북한 대사관과

1)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의 8월 6일자 기사.

연계된 북한 관광 전문 대리점의 개설을 허가했다. 또 5월 17일부터는 만경봉호가 주 1회, 북한 나진 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운항하고 있다.²⁾

셋째, 남·북·러 삼각경협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대북 경협의 끈을 놓지 않으려 고심하고 있다. 8월 4일, 러시아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시 전자 입국사증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자를 면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러시아 국내에는 약 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북한은 연간 1억 2천만 달러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 살리기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다. 러시아가 올 1~6월 북한으로 수출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은 약 4천304톤으로 약 24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2천171톤, 98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이러한 공식 통계가 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본 도쿄신문(6월 29일자)은 북한이 최근까지 러시아로부터 연간 20만~30만 톤의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제공받아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연료 조달을 담당하던 전 간부 리정호가 교도통신에서 폭로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산 석유는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중국 수출용으로 둔갑했다가 북한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수입해 왔으며 그 절반 이상이 경유다. 싱가포르의 중개업자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훗카로부터 유조선으로 수송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 산 원유를 정제한 가솔린이나 경유는 17만~20만 톤으로 북한군이 독점하는 데 반해, 러시아 산 석유제품은 자동차나 선박, 열차 등 광범위한 용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시장경제는 러시아에 연료를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6월 초, 미 재무부가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석유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정보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이상을 근거로 우리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영향력 제고를 위해, 또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합뉴스』 9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측과의 상업분쟁과 경영난을 이유로 취항 3개월여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겨놓으려는 러시아의 전략은, 최근 미 의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더욱 힘을 받는 형국이다. 북러 관계의 현재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동병상련’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대신할 수 없다. 2017년 1분기 북러 교역 규모가 대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러 무역량은 전체의 1.2%에 불과해 중국의 92.5%에는 비교 불가다. 국제 유가 하락과 루블화 폭락,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과거 소련이 북한에 해주었던 것처럼 원조와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적으면 상대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작용시키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대북 중재 역할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극동개발의 의미와 한러 경험

물론,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잣대로만 재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우회한 한러 경험을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러시아가 바라는 메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려면, 또 우리가 북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하거나 참여시키는 일이 불가결하다. 하지만 더 이상 북한으로 인해 한러 협력이 저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한러가 협력의 장을 만들어 두고 북한을 유인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경제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외국 기업에 투자하고 합작 사업을 벌이며 개발에 참여하는 행위는 수익 창출에 목적이 있다.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여전히 주판알만 튕겨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땅이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인프라가 약하고 시장이 협소하다. 푸틴 정부가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선언하는 한편,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통 큰 제도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 개발의 미래를 선뜻 장밋빛으로만 그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극동·연해주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땅이며 또 통일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갈 출구다. 아시아패러독스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에서 극동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의 미래가 교차하는 경쟁과 협력의 공간이며 다자협력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평화지대이다. 극동의 번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비전 없이 수익성만 보고 이 지역 개발에 뛰어드는 일은 무모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천천히 간다. 즉 일이 시작되고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더라도 당장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들은 일단 미래의 성공을 위해 연구하는 시간으로 돌리고, 중소 규모의 알찬 사업 아이템들을 하나 둘 씩 늘려가면서 극동 비즈니스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자동차 수출과 식품 등 분야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성공을 거둔 사업 아이템이 적지 않다. 극동 개발의 이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신성장 동력을 한리가 함께 만들어 세계에 발신할 때다. 한리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인내심과 중장기적 비전이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9월 11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중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듯이,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리의 편이 되어 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대러 정책의 방향은 일단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경보정(以經補政), 즉 경제로써 정치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